

K-Taxonomy 가이드라인 최종 개정안 발표

- 확정된 개정안은 녹색 판별 기준으로 본격 적용 -

환경부는 지난 23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개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발표된 초안 대비 주요 개정사항은 ▲공통 분야 ▲원자력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 시설 신설 등입니다.

1. K-Taxonomy 추진 개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K-Taxonomy)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4월 21일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K-Taxonomy를 수립하고 2021년 12월 30일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6대 환경목표 - 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 순환경제로의 전환 ⑤ 오염 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 보전

* K-Taxonomy 초안 내용 참고(2022. 01 뉴스레터)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발표](#)

K-Taxonomy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되는데, 녹색부문은 6대 환경목표에 직접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을, 전환부문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녹색부문 64개, 전환부문 5개 경제활동으로, 총69개의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되었는데, 원전은 포함되지 않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환 부문에 조건부로 포함된 바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이후 환경부는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K-Taxonomy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7월 확정된 EU Taxonomy*를 참고하여 2022년 9월 20일 원전 경제활동 부문을 포함한 K-Taxonomy 개정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의 의견 추가 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2022년 12월 23일 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 EU Green Taxonomy 관련 참고(2022. 07 뉴스레터) ⇨ [EU 그린 택소노미 동향](#)

2. 개정안 주요 내용

1) 친환경 경제 활동 추가

이번 'K-Taxonomy 가이드라인' 개정안에는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원전 경제활동 3개와 기후변화 적응 관련 경제활동 1개가 신설되었습니다.](#)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

원전은 지난 9월 20일 개정 초안 발표 이후 대국민 공청회,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금융계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연구·개발·실증에서 환경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와 '우주용 (초)소형 원자로'는 경제활동에서 최종 제외되었습니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의 조기 확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문구가 인정조건에 추가되었습니다.
-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등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추가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대형산불 등을 방지하고 기후 예측 관련 시설에 대한 기술혁신과 선제적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가이드라인 개정안 내 Taxonomy 구성: 2개 부문, 74개 경제활동

- (녹색부문)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7개 경제활동
- (전환부문)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 LNG 발전, 블루수소 제조 등 7개 경제활동

2) 제도 운영 개선점 보완

금번 개정안에는 시범사업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점이 도출되어 보완되었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만 포함됐던 [연구·개발·실증, 혁신 품목* 관련 경제활동을 6대 환경목표 전반에 적용 가능하도록 '공통' 분야가 신설되었습니다.](#)

*「혁신성장 공동기준」(22.1,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에서 제시한 품목을 기반으로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과 관련된 품목을 선별

또한, 적용 과정 및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대출, 투자, 구매, 리스, 할부 등\)를 제공하는 활동도 녹색경제활동임을 총론에 명시했습니다.](#)

3) 기타: K-Taxonomy 해설서 및 녹색채권 지침서 개정안 공개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함께 사용자 중심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해설서도 공개하였습니다.](#) 해설서는 무엇이 녹색경제활동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자발적 지침인 K-Taxonomy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기업과 금융기관의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적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고용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부문별 경제활동에 대한 해설과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문별 경제활동 해설에서는 '부문-목표-분야-활동-기준'의 체계로 74개 경제활동의 주요 용어 및 관련 산업공정 등을 설명하였고, 묻고 답하기에서는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 개정안도 지난 12월 16일 공개하였는데, 2020년12월 발표된 초안 대비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위한 적합성 판단 절차 도입, △외부검토키관 등록제도 시행, △녹색채권 사후 관리(모니터링) 체계 정립 등 의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3. 시사점

환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K-Taxonomy를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과 함께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제도 정착을 위해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그린워싱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경제활동 및 기업에 대한 친환경성 판별 및 녹색 자금 조달 과정에의 Taxonomy 적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사는 녹색 금융(대출, 투자, 구매 등)에 Taxonomy 기준을 적용해 적합성을 평가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고, 일반 기업의 경우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의 Taxonomy 적합성을 판단하여 녹색 채권 및 금융상품을 통한 녹색자금 조달을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금융사와 일반 기업 모두 ESG 공시*에 Taxonomy 활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융사: 녹색 포트폴리오 비중 공시, 일반기업: Taxonomy 평가기준 충족 매출, 비용 비중 등.

이에 기업들은 K-Taxonomy 관련 내용을 살펴서 기업 경영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의 ESG센터는 막연한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신승국

미국변호사

T. (+82) 2 6182 8502

E. synn@yoonyang.com

이광욱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35

E. kwlee@yoonyang.com

이근우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58

E. klee@yoonyang.com

양희

컨설턴트

T. (+82) 2 6003 7674

E. hyang@yoonyang.com

김현지

컨설턴트

T. (+82) 2 6003 7470

E. khji@yoonyang.com